

“고작 1년 8개월이라니… 짓값 턱없이 부족”

■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지역사회 반응

5·18 등 광주시민단체, 권력 따라 달라진 판결 비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과…“항소심서 엄한 처벌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동떨어진 형을 선고하자, 광주시민사회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

기 특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의 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광주 시민단체, 5·18단체 등은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손상웅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단돈 몇만 원의 실수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하게 적용되지만 권력자

와 그 가족에게는 거액의 금품수수와 불법 행위조차 ‘임종 부족’과 ‘정황 불충분’으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의 법 정의가 여전히 권력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향된 관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법치다”고 덧붙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며, 특검이 제대로 증거를 파헤치지 못한 결과다”며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엄한 처벌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주범이라는 점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봐주기식 선고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송창운 광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부장 역시 “법리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부장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량 역시 특검 구형과 비교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고개를 저었다.”

송 지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비해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인식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다시 치열하게 다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종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방조법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협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로 발생한 이의 특정인에게 전송해야 한다는 법원의 전제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판결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송 지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비해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인식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다시 치열하게 다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5·18 북한군 개입설 ‘불법 행위’ 확정

대법원 “지만원 9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은 ‘민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5·18기념재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만원은 2020년 발간한 해당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용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5·18기념재판과 5·18 관련단체 등은 해당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1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항소심에서 피고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판과 단체, 5·18 유공자 및 유가족 등 원고 12명에게 총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징계하도록 명령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공무원 사칭 1억대 물품 대리 구매 사기 발생

공무원을 사칭한 1억원대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해 여수시가 보이스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서점운영하는 A씨는 최근 여수시 회계과 직원을 사칭한 B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하고 소액 물품을 실제 구매하며 A씨와 유대감을 쌓은 뒤 제세동기 대리 구매를 유도해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는 남긴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고 “24일 회계과로 오면 밥을 시겠디”는 말을 믿고 여수시청을 찾았다가 수

상황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가구점 운영자도 비슷한 내용의 문의 전화를 걸어온 점을 고려하면 동종 사기 시도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도 문화예술과 직원을 사칭하며 불꽃축제에 쓸 음료를 대리 구매해 달라는 말에 속은 김밥집 주인이 600만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사례를 엄중히 인식하고 전 직원 대상 사례 공유를 비롯해 나라장터 공지사항 게시, 여수시 공식 SNS·누리집 흥보, 이·통장 회의자료 배포,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펼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비트코인 410억 분실’ 광주지검, 내부 감찰 착수

수사관 5명 휴대전화 압수·디지털 포렌식 조사 추진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을 두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압수율 관리와 인수인계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대법원이 이달 초 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분실된 비트코인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비트코인 털취자체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감찰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면서 “피싱 피해 금액을 추적해 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혼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물 07:34 일물 13:42
해물 17:58 일몰 04:11



심야시간대 주먹질한 10대

만년필 ○…서로 일면식
이 없던 10대 남성 2명이 심야 시간대 발생한 시비로 주먹을 휘둘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1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A군은 지난 1월 6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 인근에 서 B군을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 역시 A군 폭행에 대응해 얼굴을 1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돼 폭행 혐의가 적용.

재판부는 “A군은 무차별적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해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다만 A군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임영진 기자 looks@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안모씨는 “당신의 빙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왜 당신이 죽어야 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가장 두렵다. 이대로라면 당신의 죽음은 그저 ‘사고’로만 남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추모제 마지막 순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봉고현장으로 이동해 현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했다. 현장에는 ‘안전한 현장을 기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조용히 바람에 흔들렸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2층 옥상이 무너져 구조물이 연쇄 폭발했고, 진해에 매몰된 작업자 4명은 사고 발생 약 48시간 만에 모두 수습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대표도서관 봉고사고 49재

“왜 죽어야 했는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추모객·종교계 현화·묵념…희생자 애도 유가족 “재발 방지·사고 원인 규명” 촉구

광주대표도서관 봉고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의 넉을 기리는 49재가 사고 현장에서 열렸다.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사고 발생 49일이 지났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유가족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2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49재를 열고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날 추모제는 묵념을 시작으로 종교

계 추모 의식, 진한무, 유가족 추모사, 현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제에는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폭염 속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숨진 청년의 부모 등도 참석해, 반복되는 산업·사회적 참사에 대한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유가족들의 호소는 더욱 절절했다. 희생자 서정운씨의 동생 서정원씨는 “작년 추석 때 잠깐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곳에서 잘 행복하게 지내라 말할 수 없다”며 “아직도 형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광주시와 종합건설이

사고 현장 앞에서 추모하고 있다.”고 혼명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봉고사고 사망자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사고 현장 앞에서 추모하고 있다.

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름만 남아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